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 1.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ㄱ.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
- ㄴ. 주민투표법
- □.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
- ㄹ.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
- \bigcirc $\neg \rightarrow \bot \rightarrow \exists \rightarrow \Box$
- \bigcirc \Box \rightarrow \Box \rightarrow \rightarrow \rightarrow \rightarrow
- 4 $\sqsubset \rightarrow \lnot \rightarrow \rightleftarrows \rightarrow$

문 2.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 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, 시·읍·면장은 각 시·읍·면의 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.
- ② 1960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.
- ③ 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군 (郡)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.
- ④ 1998년 '6.4 지방선거'에서 처음으로 '전국동시지방선 거'를 실시하여,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.

문 3.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다.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문 4.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?

- ① 지방자치발전위원회
- ② 지방이양추진위원회
- ③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
- ④ 기능이양합동심의회

1. ②

정답 및 해설

- · ㄱ.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: 1999년 제정
- · ∟. 주민투표법: 2004년 제정
- · ㄹ.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: 2006년 제정(2007년 시행)
- · ㄷ.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: 2010년 제정

2. ④

·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 날은 <u>1995년 6월 27일</u> 이다.

정답 및 해설

3. ③

- · 지방자치법 제54조(임시회) 제1항: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4. 정답 없음(기존 정답: ①)
- · 2022년 기준 <u>자치분권위원회</u>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기구이다.
 - ※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(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):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<u>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</u>를 둔다.
 - ※ 자치분권 관련 추진위원회 연혁
 지방이양추진위원회(김대중 정부) →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(노무현 정부) → 지방분권촉진위원회(이명박 정부) + 지방하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(이명박 정부) → 지방자치발전위원회(박근혜 정부) → 자치분권위원회(문재인 정부)

문 5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'보조기관'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소방기관
- ② 출장소
- ③ 부지사
- ④ 사업소

문 6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.
- 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의 시(市)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.
-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.
- ④ 광역시에 군(郡)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.

문 7. 지방자치법상 시(市)·읍(邑)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(市)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② 시(市)、읍(邑)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.
- ③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(郡) 은 도농(都農)복합 형태의 시(市)로 할 수 있다.
- ④ 읍(邑)이 없는 도농(都農)복합 형태의 시(市)에서 그 면 (面) 중 1개 면(面)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 (邑)으로 할 수 있다.

문 8.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 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5. ③

- · 보조기관: 부지사
- · 소속행정기관: 소방기관(직속기관), 출장소, 사업소
- 6. ②
- ·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: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<u>자치구가 아닌 구</u>를 둘 수 있고…

정답 및 해설

7. ②

· 지방지치법 제10조(시·읍의 설치기준 등) 제4항: 시·읍의 설치 에 관한 세부기준은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한다.

8. ②

- ·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: <u>행정안전부장관은</u>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u>
 - ※ 2022년 기준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문 9. 지방세 중 도(道)세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담배소비세
- ② 지방소득세
- ③ 지방소비세
- ④ 자동차세

문 10.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 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 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하다.
- ④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정답 및 해설

9. ③

·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

구분	도	시·군
특·광역시	취득세, 레저세,	주민세, 자동차세,
	<u>지방소비세</u>	담배소비세,지방소득세
구	등록면허세	재산세

10. ①

·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: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<u>5일 이내</u>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.

문 11.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 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.

문 12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1. ④

·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: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</u>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2. ③

·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: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</u>로 정한다.

문 13.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.
- ②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이 지급된다.
- ③ 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.
- ④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문 14.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?

- ①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
-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
- ③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
-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

정답 및 해설

13. ③

- ·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직자(이하 "등록의무자"라 한다)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.
 - 2. <u>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</u> 무직공무원

14. ②

- · ① 지방자치법 제120조(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)
- · ③ 지방자치법 제121조(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)
- · ④ 지방자치법 제12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)

문 15. 다음 ⊙, ⓒ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?

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 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 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(①)로 정한다. 다 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의 변경은 (②)으로 정한다.

	\bigcirc	<u>©</u>
1	법률	대통령령
2	법률	규칙
3	조례	대통령령
4	조례	규칙

문 16.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①

· 지방자치법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제1항: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(③ 법률)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(<u>© 대통령령</u>)으로 정한다.

16. ①, ③, ④ (기존 정답: ③)

- ·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: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이하 "청구권자"라 한다)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· ③ 지방자치법 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제1항: ···<u>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</u>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,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임차·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·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·사용 료·수수료·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·징수를 게을리한 사항···
- · ④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 터 <u>3년</u>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
문 17.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.

문 18.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.
- ② 교육의원은 시·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- ③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

문 19.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.
- ②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다.
- ③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문 20. 지방자치단체인 A군(郡)과 B군(郡)이 사무의 일부를 공 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'행정협의회'를 구성하고자 할 때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 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.
- ②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(郡) 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 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9. ①

- · 주민투표법 제22조(투표운동의 제한) 제1항: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.
 - 1.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
 - 2.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
 - 3. 「공직선거법」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
 - 4. 「공직선거법」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
20. ①, ③(기존 정답: ①)

- ·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제1항: ···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<u>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</u> <u>지사에게</u>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·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: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<u>관계</u>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 - ※ 2022년 기준 행정자치부 →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정답 및 해설

17. ②

·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: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18. ③

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: 정당은 교육감선거 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